

주간 통일정세

2015-51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
3. 대내 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北, ‘南 인권백서’ 발표…국제사회 ‘인권공세’ 물타기(12/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남조선인권대책협은 26일 “올해에도 남조선에서는 세인을 경악케 하는 참혹한 인권유린 참사들이 연이어 빚어져 온 민족과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냈다”며 ‘2015년 남조선인권유린 조사통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협회는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재미동포 신은미 씨 등의 ‘종북 논란’, 언론탄압, 물대포와 최루액을 동원한 시위진압, 메르스 사태 등을 올해 남한에서 있었던 ‘인권유린’ 사례라고 주장함.
 - 또 북한 송환을 희망하는 탈북 여성 김련희 씨 사례, 청년실업, 아동학대, 군대 내 폭행,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 발언과 지난 6월 서울에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며 비난의 날을 세움.
 - 협회는 박 대통령의 북한 인권 언급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설립 등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에 도전하는 인권 모략 소동이 북남관계에 미칠 파국적 후과에 대해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회담결렬’ 책임전가 의도는…“대화재개 희망” 분석도(12/21,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21일 ‘대결악습이 빚어낼 것은 북남관계 파국뿐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남당국회담의 결렬은 남조선 당국의 고질적인 대결악습이 초래한 필연적 귀결”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이어 “남조선 당국자들은 북과 남 사이의 진정한 대화와 협상, 관계개선을 꼬물(아주 조금)만큼도 바라지 않았다”며 “그들에게 있어서 북남대화는 저들의 대결정책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도 21일 “이번 회담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남조선 당국에게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문제를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려는 관점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남한 책임론을 제기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북한 ICBM 설계 변경으로 2020년 이후에야 실전 배치될 것”(12/22, 38노스)
 - 38노스는 22일 보도를 통해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의 설계를 종전 3단체에서 2단체로 변경하면서 실전 배치 시점이 2020년 이후로 늦어질 수 있다고 분석함.
 - 항공우주분야 연구기관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 연구원과 제프리 루이스 미국 비확산센터(CNS)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10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KN-08은 2012~2013년 공개한 것에 비해 짧고 단순하며, 탄두가 뭉툭하고, 기존 3단체에서 2단체로 변형됐다”며 “전반적인 미사일 성능은 대체로 그대로지만 (성능의) 신뢰도는 상당히 향상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기존 모델의 발사 성공률이 30~40%에 불과한 반면, 신형 모델에서는 성공률이 50~6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함.
 - 그러면서 이전 모델과 다른 뭉툭한 탄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쉬운 데다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탄두를 고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확성은 다소 떨어지고 미사일방어체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밝혔고, “2012~ 2013년 공개된 이전 모델을 기준으로 KN-08 미사일의 사거리는 9천km로, 미국 서부까지 다다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복잡한 3단체 구조라 실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능하긴 어려워 보였다”며 “그러나 새로운 설계는 더 단순하고 신뢰도도 높아 더 믿을 만한 위협요인”이라고 지적함.
- “北, 플루토늄 6kg 이하로 핵무기 1개 만들 수 있다”(12/2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5일 보도를 통해 군과 정보 당국이 북한이 플루토늄 6kg 이하로도 핵무기 1개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하면서, 보통 핵무기 1개를 제조하는 데는 플루토늄 6kg 정도가 필요한데 북한은 이보다 적은 양의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의 판단이 수정된 것이라 설명함.

- 뉴스는 군과 정보당국이 최근 “핵무기 1개 제조에 플루토늄 6kg 정도가 소요되지만, 북한의 경우 핵무기 개발 경과를 고려할 때 적은 양의 플루토늄으로도 핵무기 1개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했다고 전함.
- 이와 관련하여 소식통은 “북한이 40여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공식 자료를 아직 수정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북한이 그간 핵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지난 8월부터 영변 2원자로(5MWe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플루토늄 확보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함.

■ 공중-해상전력 취약한 北, ‘북한판 패트리엇’ 개발 주력(12/27,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정부의 한 소식통은 27일 “북한군은 사거리 100여km의 개량형 지대공 미사일(KN-06)을 개발 중이고, 함대함 미사일(KN-01)의 성능도 계속 개량 중”이라며 “올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가운데 KN-06와 SA계열, KN-01의 발사 횟수가 많았다”고 밝힘.
-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공중 및 해상전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북한이 한반도 유사시 공중과 해안으로 접근하는 한미 연합군을 겁내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북한은 연합 공군 및 해군 전력을 저지할 목적으로 지대공 및 함대함 미사일 개량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전투임무기 820여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그-29, 미그-23 등 90여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구형”이라며 “김정은이 이런 실정을 알고 대공 전력운용 부대의 훈련 미흡을 질책하고 전력보강을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민간단체 통한 대북지원 규모, 작년 2배로 급증(12/2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3일 통일부의 발표를 인용하여, 지난 1월 초부터 12월 17일까지 국내 민간단체를 통해 이뤄진 대북지원의 규모가 총 63건(112억 원)으로 집계되어 지난해(54억 원)보다 107% 증가했다고 보도함.
- 신문은 세부적 지원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간단체 자체 재원으로 진행된 것이

40건(91억 5천여 만 원)으로 대부분이며,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것은 23건(20억 4천만 원)으로 주로 의약품과 의료소모품, 영양식, 분유, 진료소자재, 묘목, 온실 자재 등이고 특히 농축산·산림·환경분야 지원액은 35억 원으로 전년도(2억 3천만 원)의 15배로 나타났다고 전함.

- 그러면서 다만 유니세프(UNICEF)와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2014년 141억 원에서 올해 107억 4천만 원으로 감소하였다고 덧붙임.

■ 남북,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요율 분양가의 1.56%로 합의(12/2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올해부터 북한 당국에 내야 하는 토지사용료 요율이 분양가의 1.56%인 1㎡당 0.64달러로 결정됐다고 24일 보도하면서, 통일부의 발표를 인용하여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오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토지사용료 기준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덧붙임.
- 뉴스는 합의문에서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를 1㎡당 0.64달러로 정했으며, 개성공단 1단계 330만㎡(100만 평)의 분양가인 3.3㎡당 14만9천원과 당시 원·달러 환율을 고려하면 이는 분양가의 1.56%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고 하면서 최근까지 북측이 분양가의 약 2%, 남측이 1% 내외를 주장하며 맞서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측이 서로 양보해 중간지점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함.
- 이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자는 “토지사용료는 개성공단 개발·운영의 특수성, 국제기준,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면서 “이는 국제 수준의 기업활동 조건을 보장해 경쟁력을 갖추나간다는 발전적 정상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토지사용료는 앞으로 4년마다 관리위원회와 총국간 합의를 통해 조정되며, 조정폭은 종전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요율과 함께 마지막까지 양측 입장이 엇갈렸던 토지사용료 부과 대상은 남측 요구대로 ‘실제 생산·상업활동이 이뤄지는 토지’로 제한된다고 밝힘.

바. 남북 사회 관계

■ 개성에서 南北여성 문화행사 열렸다…“동질성 회복 계기 되길”(12/2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3일 한국여성단체연합·전국여성연대 등 33개 여성단체가 참여한

남북여성 공동 문화행사가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들 단체 대표와 회원 등 60여 명으로 구성된 남측 대표단은 23일 당일 일정으로 개성을 방문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모임’에 참가한 후 당일 서울로 돌아왔다고 전함.

- 뉴스는 이번 행사에서 남측 대표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안김정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이광옥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회장이, 북측 대표로는 김명숙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변규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부위원장·리산옥 조선카톨릭 교협회여성회 회장이 나왔으며, 이후로 노래공연 및 오찬행사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 남북 여성 단체가 만나는 것은 지난해 3월 중국 선양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해외여성토론회’ 이후 1년 9개월 만이라고 뉴스는 전함.

- 통일부 장관 발언(이산가족-금강산 관광 맞교환 방식 바람직하지 않음, 꼭 지켜야 할 원칙 훼손할 수는 없음) 관련 ‘회담 결렬의 책임을 우리(北)에게 넘겨쓰우고 저들의 대결책동을 합리화하려는 불순한 기도의 발로’라고 비난(12.23, 중앙통신·민주조선)
- 「미군범죄 진상규명 전민족 특별조사위」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12.24), 주한미군의 탄저균 등 한국 반입·실험은 “미국판 731부대”라고 비난 및 ‘남한의 비호두둔도 준엄한 심판’ 선동(12.24, 중앙통신·중앙방송)
- 2015년 남북 관계는 “대결이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남한의 反北 군사적 대결 망동이 계속 되는 속에서는 남북 관계는 개선될 수 없다’고 책임 전가(12.24, 평양방송)
- 남조선인권대책협회, 우리 남한의 메르스 발생과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경찰의 ‘민중 총궐기 집회’ 진압 등을 거론하며 ‘보수 집권세력이 2015년에 저지른 인권 유린 죄상을 조사하여 발표한다’며 ‘2015년 남조선인권유린조사 통보’ 발표(12.26, 중앙통신)
- 미국의 한 정치평론가가 現 美행정부의 대외 및 인권정책을 비난한 것을 거론하며 ‘이것은 전 세계를 전쟁의 불도가니 속에 몰아넣은 평화파괴의 주범에 대한 단죄’라며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미국의 범죄적 흥계를 똑바로 꿰뚫어보고 그것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도 높히 벌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12.26, 중앙통신)
- 日 경찰의 정부 보조금 부당 수령 혐의 총련 직원 3명 체포 관련 ‘일본 사회에 총련에 대한 적대의식을 더욱 고취하기 위한 책동’이라며 ‘공화국은 일본 반동들의 反공화국, 反총련 도발행위들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12.26, 중앙통신·민주조선)
- 통일부 장관 발언(12.17. 관훈토론회,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 수용 不可’·금강산 관광재개 문제를 ‘6·15공동선언을 부정한 것이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거부하기 위한 구실마련의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12.27, 중앙통신·노동신문)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생물작용제 보유' 지적에 "터무니없는 모략" 반발(12/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북한이 탄저균을 포함한 생물학 작용제 13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사시 사용할 수 있다'는 한미 양국의 지적에 대해 21일 보도를 통해 '터무니없는 모략'이라고 반발함.
 - 신문은 '살인마들을 고발하는 탄저균 불법 반입사건' 논평에서 "미국과 남조선(남한) 당국이 '북이 탄저균과 페스트균 등을 보유'하고 '테러와 전면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실로 터무니없는 모략설을 내돌리고 있다"고 비난함.
 - 그러면서 신문은 "이것은 있지도 않는 '북의 생물무기 위협'을 턱대고 저들의 탄저균 불법 반입 범죄를 정당화하며 유사시 우리 민족의 머리 위에 악마의 세균을 마구 뿌려 북침 야망을 한사코 실현해 보려는 위험한 흥계의 발로"라고 주장함.
- 北, DMZ 지뢰도발 "미국의 흥계로 北소행 둔갑" 억지(12/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새 전쟁도발의 원흉 미국을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상보'를 통해 "8월의 조선전쟁 도발을 위한 제반 조건과 환경을 조성한 미국은 그 도화선에 불을 달도록 남조선 군부를 내몰았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통신은 "남조선 군부가 초기 비물류실(빛물유실)에 의한 지뢰폭발로 인정하였던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 헌병초소에서의 사고가 미국의 흥계 밑에 그 후 '북 소행'으로 둔갑하고 그를 구실로 반공화국 심리전 방송이 전 전선에 걸쳐 재개되었다"고 강조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마. 대중국

- “북한, 모란봉악단 철수 ‘사과’ 특사 중국에 파견”(12/23, 니혼게이지)
 - 니혼게이지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2월 초 있었던 모란봉 악단의 갑작스러운 철수를 사과하기 위해 각료급 특사를 최근 베이징(北京)에 보냈다고 23일 보도함.
 - 신문은 나카자와 가쓰지(中澤克二) 편집위원의 기명칼럼에서 북·중 관계를 잘 아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 “김정은이 아주 최근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에) 사과하기 위해 각료급 인사를 베이징에 보냈다”고 전했으며, “내년에 모란봉악단을 다시 중국에 보낼 계획”이라고 전하고 시기는 36년 만에 내년 5월 열릴 예정인 조선노동당대회 이전이 될 것이라 말했다고 덧붙임.

바. 대일본

- “北·日, 최근 한달간 중국서 납북자관련 3차례 비공식 협의”(12/21, 아사히신문)
 - 아사히신문은 북한과 일본이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3차례 걸쳐 중국에서 납치 문제 관련 비공식 협의를 개최했지만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고 21일 보도했으며, 가나이 마사아키(金井正彰)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 과장이 11월 중순과 하순 상하이(上海)에서 이달 중순 다롄(大連)에서 북한 당국자와 만났다고 전함.
 - 신문은 가나이 과장이 일본 정부가 공인한 납치 피해자 12명의 안부 정보를 포함한 납치 재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함.
 - 그러면서 신문은 북측이 ‘일본이 말하는 12명 중 8명은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입국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으며, 이에 태평양 전쟁 종전을 전후해 한반도에서 숨진 일본인 유골 반환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했다고 덧붙임.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자. 기타 국가

- CNN “캐나다 외교관, 북한역류 임현수 목사 면담”(12/22, CNN)
 - CNN은 캐나다 외교관들이 북한에 억류된 뒤 ‘종신노역형’을 선고받은 한국계 캐나다인 구호활동가 임현수 목사를 면담했다고 22일 보도함.
 - 방송은 주한 캐나다대사관 관리 2명과 통역사 1명이 지난 18일 오전 평양에서 임 목사를 만났고, 임 목사의 건강이 양호했다고 전함.
- 북한 “임현수 목사 판결에 캐나다 시비” 반발(12/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보도를 통해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 대한 북한 최고재판소의 종신노역형 판결을 캐나다 정부가 비판한 데 대해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반발함.
 - 이와 관련하여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자기 국민이 저지른 악랄한 범죄행위로 우리 앞에 죄를 진 처지에 놓여 있는 캐나다 정부가 거꾸로 우리의 정정당당한 사법조치를 놓고 ‘우려’요 ‘국제법 위반’이요 하면서 시비질해 나서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반공화국특대형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야 할 캐나다 정부가 오히려 비호두둔하면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우리에게 샅대질하는데 대해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캐나다 측의 부당하고 무례한 처사는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영사 접촉을 불허했지만 조사 사업이 끝난 다음 특례적으로 캐나다 대표단을 초청해 재판에 방청으로 참가시키고 영사 접촉도 실현시켜줬다”며 “캐나다 정부는 이에 대해 걸고들 아무런 법률적 명분도 없다”고 주장함.

-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韓美 합동실무단 운영결과발표(北 생물학 작용제 13종 보유 및 테러·전면전시 사용 가능 등)에 대해 “저들의 탄저균 불법반입 죄를 정당화하며 유사시 조선민족 머리위에 세균을 뿌려 북침 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흉계”라고 비난(12.21,

중앙통신·노동신문)

- 시리아 등 중동지역 불안정한 정세는 '무기장사로 제 잇속만 챙기며 저들 중심의 질서를 세우려는 미국의 침략야망 술책 때문'이라며 미국을 "세계 최대 무기장사꾼"이라고 비난(12.21, 중앙방송·노동신문)
- 미국의 '조선인민군 전략군' 등 4개 단체와 北 외교관에 대한 제재대상 지정 관련 '아메리카 제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더욱더 횡포무도해지고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의 제재소동은 우리(北) 노동계급의 자력갱생 정신과 자강력을 더욱 분발시킬 뿐'이라고 주장(12.23, 중앙통신·노동신문)
- 美 민간연구단체 전문가들의 발언(사드야말로 北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 관련 '국제사회에 사드의 남조선 배비를 실행해보려는 교활한 여론전'이라며 '미국이 사드를 남조선에 배비하려고 획책할수록 미국과 우리(北) 주변나라들 사이의 모순과 마찰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12.23, 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은 인종과 피부색 때문에 차별과 멸시를 당하고 언제 총에 맞아죽을지 몰라 공포에 떨어야 하는 인간생지옥, 인권말살 시대'라며 '미국은 주제 넘는 인권재판관 행세를 그만두고 인권피고석에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12.23, 중앙통신·노동신문)
- 2015년 한반도 정세 관련 「중앙통신사 상보(12.24), 새 전쟁도발의 원흉 미국을 고발한다」, 올해 '미국의 對北 적대시정책·전쟁정책으로 한반도 정세는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고 비난 및 '北 병진노선 정당성 및 미국의 對北정책 철회' 주장(12.24, 중앙통신·중앙방송)
- 경기도 화성시가 캐나다 토론토에 건립한(11.18) <평화의 소녀상>은 '파쇼제국의 죄악을 기어이 청산하려는 세계 민심이 얼마나 준열한가를 깨우쳐주고 있다'고 '일본의 과거청산 회피' 비난(12.24, 중앙통신·노동신문)
- 美합참의장, '차세대 국방어젠다' 세미나(12.14)에서의 한반도 전쟁시 초(超) 지역적 분쟁으로 확산 가능 원인으로 '北 탄도미사일 개발' 등 거론 관련 '평화파괴자의 감투를 씌워 반공화국 적대시정책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전쟁억제력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12.25, 중앙통신·노동신문)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김정은, 북한군 기동훈련 참관...“실용적 훈련 많아야” 주문(12/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군 제526대 연합부대와 제671대연합부대 간의 쌍방기동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하면서, 2개 기갑부대 간에 진행된 훈련에는 경보병(특수전)요원, 자주포, 방사포, 헬기 등이 동원됐으며, 훈련은 기갑부대가 차단물을 설치하고 방어부대가 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함.
 - 통신은 “(지난해 훈련 이후) 기계화부대들의 높아진 전진보장 능력을 확정하고

겨울철 조건에 맞게 전진보장과 차단물 설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찾아 대책을 세우며 전군에 백두산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밝혔으며, 김 제1위원장은 훈련을 참관한 뒤 “방어와 공격이 나무랄데가 없다”면서 “오늘 훈련을 통하여 적들의 불의의 침공을 제때에 격파분쇄하고 공격으로 이전할 수 있는 완벽한 방어와 강력한 공격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고 평가함.

- 그러면서 김 제1위원장은 이어 “가장 치열하고 엄혹한 전쟁에 대처하자면 실용적 훈련을 많이 하여야 한다”면서 “형식주의, 고정격식화, 멋따기식훈련,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 부대의 전투임무수행의 특성에 맞지 않는 훈련은 백번, 천번 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인민군대에서 당의 훈련제일주의 구호를 높이 들고 백두산훈련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전투력 강화와 싸움준비 완성의 자랑찬 성과로 맞이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고 전함.
- 이날 훈련장에서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방관복 부총참모장, 제526대연합부대의 최두용 부대장과 윤희환 정치위원, 제671대연합부대의 강순남 부대장과 김정철 정치위원 등이 김 제1위원장을 맞이했다고 통신은 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코뿔소 뿔 밀매’ 北외교관, 남아공서 추방(12/23, 신화통신, 뉴스24)
 - 신화통신은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코뿔소 뿔을 밀매하다 적발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 북한대사관 외교관이 추방됐다고 23일 보도하면서,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 넬스 크그웨테 대변인을 인용해 지난 5월 체포된 박철준 참사가 지난 11일 남아공을 떠났다고 전함.
 - 아프리카 현지 매체인 뉴스24는 남아공 정부가 지난달 박 참사에게 30일 안에 출국하라고 최후 통첩했다고 보도하였고,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남아공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국경 통과 시 검색을 받지 않는 특권을 악용해 인접한 모잠비크 주재 북한 보건대표부의 도움을 받아 수시로 코뿔소 뿔 밀매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 북한, 평북도당 책임비서에 김능오 임명(12/26,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6일 평안북도 창성군 은덕원(종합편의시설)과 인민병원 개원식 소식을 전하며 “김능오 책임비서가 개원사를 했다”고 보도함.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北, 당대회 앞두고 ‘김정은 띄우기’ 창작 주문(12/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당 제7차 대회를 전례없는 명작폭포로 맞이하자’란 사설에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이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며 “문학예술 부문의 전체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당이 요구하고 인민이 바라는 명작들을 팡팡 내놓음으로써 당 제7차 대회를 전례없는 명작폭포로 빛내이자”고 강조함.
 - 신문은 이어 “창작가,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과 당 정책결사 관철의 기풍으로 여러 가지 형식의 예술활동을 힘있게 벌려 글폭탄, 노래폭탄, 춤폭탄으로 군인과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을 위훈창조예로 추동해야 한다”고 설명함.
 - 그러면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인적 풍모와 불멸의 영도 업적을 높이 칭송하는 기념비적 명작들을 창작하는 데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라며 문화예술 작품의 창작 지침과 내용까지 소개함.
- 北, 김정은 조모 김정숙 ‘띄우기’...생모에는 ‘침묵’(12/22,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김정숙의 생일(12월24일)을 앞둔 22일 ‘통일애국의 길에 빛나는 고귀한 생애’라는 글에서 “김정숙 여사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빛나는 귀감”이라며 “여사는 세월과 더불어 겨레의 마음 속에 영생하신다”고 보도함.

- 신문은 이어 “조국 통일을 위해 바치신 여사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따라 조국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 온 겨레의 통일 애국의 길에서 길이 빛나고 있다”고 주장함.
- 北, 김정일 핵개발 업적 부각…최고사령관 추대 24주년(12/24, 노동신문, 조선의오늘)
 - 노동신문은 24일 사설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의 험산준령들을 다 넘으시며 마련해주신 강위력한 자위적 군사력, 핵보검이 있기에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도전을 걸음마다 짓부수고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함.
 - ‘조선의오늘’도 24일 “주체95(2006)년 10월 9일 지구를 들었다놓으며 선군조선의 첫 핵뢰성(핵폭발음)이 울렸다”며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탁월한 선군령장, 절세의 애국자”라고 치켜세움.
 - 매체는 “100% 자체의 지혜와 기술에 의거한 지하핵시험에서의 완전한 성공, 이것은 세기를 두고 강위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을 안겨준 역사적인 대사변이었고 대경사였다”고 말했으며, “우리 장군님(김정일)께서 핵억제력을 마련해주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는 핵참화가 몇 번이고 휩쓸었을 것이며, 새로운 세계대전을 방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함.
- 북한, 크리스마스 이브에 김정숙-김정일 ‘띠우기’(12/24, 노동신문, 조선의오늘)
 - 노동신문은 24일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 역사를 끝없이 빛내어나가자’란 사설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지니시고 혁명을 이끄신 역사는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시어 현시대와 인류의 미래를 대표하는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을 마련하신 성스러운 역사”라고 치켜세움.
 - 그러면서 신문은 ‘민족단합을 위한 어머니의 자애로운 손길’이란 글을 통해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생애는 우리 당과 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공적으로 하여 앞으로도 영원히 빛날 것”이라며 김정숙을 찬양함.
 - ‘조선의 오늘’도 ‘12월 24일이 전하는 뜻깊은 사연’이란 글에서 “오늘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4돌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그리고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어머니의 탄생 98돌이 되는 날”이라고 밝힘.

- 매체는 “아버이수령님(김일성 주석)께서는 백두의 혁명위업을 계승해 나가기를 그토록 열렬히 바라신 김정숙 여사의 염원을 실현시키는 의미에서 여사의 탄생일을 택하시어 최고사령관의 중임을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께 넘겨주신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12월 24일은 백두산 밀영의 소백수가에서 자제분을 주체혁명 위업의 계승자로 훌륭히 키우자고 다지시었던 아버지수령님과 김정숙 여사의 위대한 약속이 현실로 꽃피난 뜻깊은 날이었다”고 주장함.

■ 北 매체 ‘헌법절’ 맞아 ‘김일성·김정일헌법’ 선전(12/27,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27일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란 사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사회주의 헌법을 발표(반포)하신 것은 우리 공화국의 강화 발전과 주체혁명 위업 수행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사설은 “사회주의 헌법은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하고 수정 보충해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정식화되었다”며 “김일성·김정일 헌법은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나갈 수 있게 하는 대정치헌장”이라고 치켜세움.
- 우리민족끼리도 27일 ‘절세위인들의 존함과 업적으로 빛나는 사회주의 헌법’이란 글에서 “김일성·김정일 헌법이 채택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아버지 수령님(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자주적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강위력한 법적 무기를 틀어쥐게 되었다”고 주장함.
- 민주조선도 사설에서 “헌법절은 인민을 위해 가장 참답게 복무하는 주체형의 사회주의 정치헌장이 태어난 뜻깊은 명절”이라고 소개했고, 조선중앙방송은 ‘오늘은 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절’이란 보도를 통해 김일성·김정일 헌법을 “인민 대중의 모든 꿈과 이상을 활짝 꽃피울 수 있는 정신적 무기”라고 자찬함.

-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일성·김정일 동상 보존관리에 기여한 양강도의 여러 단위들에 ‘감사’ 전달(12.22, 중앙방송)
-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91.12.24) 24주년 즈음 ‘핵보유 등 김정일의 선군혁명 업적’ 부각 칭송 및 金民은 ‘김정일 선군혁명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어 나가자’며 ‘김정은에 충성’ 강조(12.24, 중앙방송·노동신문·중앙통신)
- 김정숙(김정은 祖母) 생일(‘17.12.24) 98주년 즈음 박영식·곽범기·김평해·김 용진(내각 부총리)·김수길(평양시 黨 책임비서) 및 당·무력·정권기관·내각 일꾼 등, 12월 24일 대성산혁명열사릉 ‘김정숙 동상’에 헌화(12.24, 중앙통신·중앙방송)
- 홍인철(국가관광 총국장), 올해 ‘북한에서 외국인(독일·영국 등) 관광(비행기·스키관 광 등)이 지난해에 비해 활성화 됐다’며 이는 ‘국가적인 관광장려 정책(입·출국 수속 간소화, 외국인 관광객들 요구 실현 등)의 결과’라고 선전(12.24, 중앙통신)
- 자강도 강계시 ‘강서고급중학교→박금산고급중학교’로 명명 및 학교에 ‘박금산(공 화국 영웅) 반신상’ 건립 제막식, 12월 24일 김재룡(자강도黨 책임비서) 등 참가자 진행(12.24,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12월 24일 故 리종옥(항일혁명 투사) 빈소에 화환 전달(12.25, 중앙방송)
-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표식비’ 준공식, 사리원 돼지공장·금컵 체육인 종합식료 공장·인민 야외 빙상장·능라 인민체육공원 관리소에서 진행(12.25, 중앙통신)
- 2015년 국가표창 수여식, 12월 2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12.25, 중앙통신)
- 2015년 체육사업 정형 총화회의, 12월 25일 ‘리일환’(국가체육지도위 부위원장인 黨 부장, 보고)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2.25,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12월 26일 故 신병강(인민군 문예창작사 사장, 김일성상·김정일상 계관인, 노력영웅,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빈소에 조화 전달(12.26, 중앙통신)
- ‘노동당의 역사는 곧 인민이 걸어온 길이고 당의 승리는 곧 인민의 승리’라며 ‘우리(北) 인민은 앞으로도 당의 돌도 없는 지지자, 조연자, 방조자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며 총정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12.26, 중앙통신·노동 신문/조선노동당의 돌도 없는 지지자, 조연자, 방조자)
- 北, ‘김일성 일화집’ 제7권(1946년 1월부터 9월까지 김일성의 혁명일화들이 4개의 장으로 편집) 출판(12.26,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12.28, 중앙방송)
- 「헌법절(‘72.12.27, 사회주의 헌법 채택)」 43주년 즈음 ‘김일성의 사회주의 헌법’은 “우리 공화국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 위업 수행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라고 선전(12.27, 중앙통신·노동신문·민주조선)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조치

- 北, 백두산3호발전소 완공시기 당대회 이전으로 앞당긴 듯(12/21, 평양타임스 12/2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 평양타임스가 21일자 기사에서 “내년 당대회 전에 발전소 건설을 끝내기 위해 북부지역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젊은 일꾼들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음을 25일 보도함.
 - 뉴스는 북한이 이 기사를 통해 이에 따라 수로터널의 콘크리트 코팅작업과 임시 배수시설 및 물막이 시설물에 대한 다지기 작업 등이 이미 마무리됐으며, 배수로 굴착 작업은 84%의 진척도를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공사들도 동시에 진행 중임을 알렸다고 전함.
- 北선전매체 “한의학 자료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12/25, 조선의오늘)
 - ‘조선의오늘’은 북한 고려의학과학원이 고려의학(한의학) 고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영구 보존하는 전자 문서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25일 보도하면서, 이번 프로그램의 개발로 “우리 민족의 우수한 고려치료 방법들을 더 많이 찾아내고 그 내용을 전자 문서화함으로써 임의의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검색 및 열람하면서 치료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함.
 - 매체는 “민족의 귀중한 유산인 고려의학 고전들의 원문 내용을 영구 보존하게 되었으며 치료사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임의의 조건에서 열람하면서 의료봉사의 질을 훨씬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고려의학 전산화 프로그램이 이런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달 11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26차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고 덧붙임.
- “北 동해안 원양어업기지 완공 단계”(12/27,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전문가인 커티스 멜빈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출연, 지난 10월 19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 “수산사업소가 거의 완공됐으며 마무리 공사만 남았다”고 밝힘.
- 위성사진에 포착된 수산사업소는 약 5만 5천㎡의 부지 위에 부두와 방파제, 수산물 냉동시설, 가공공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합숙시설과 문화회관 등도 들어섰다고 방송은 전함.
 - 이어 각 공장과 건물을 연결하는 도로도 완공됐으며, 과거 86m에 불과했던 부두 길이도 최근 1km로 늘어났다고 방송은 전함.

다. 경제 상황

- 北선전매체 “평양에 천지개벽”…5대 신축건물 소개(12/21, 조선신보)
 - 조선신보가 21일 “2015년, 조국에서는 건설의 최전성기가 펼쳐졌다”며 평양 시내의 5대 신축물들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소개함.
 - 신문은 ‘당 창건 70돌을 맞으며 천지개벽 된 수도 평양’이라는 제목의 사진특집 코너에서 먼저 “조선 노동당의 과학중시 사상이 응축된 미래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전당이 대동강반에 웅장 화려하게 일떠섰다”면서 지난달 초 준공한 미래과학자거리의 중앙통신 사진 2장을 게재함.
 - 또한 신문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리모델링 준공식과 건물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육 교양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최상의 수준에서 갖춰졌다”고 치켜세우며 만수대의사당 주변에 조성된 만수대 분수화초공원의 야경 사진을 싣고 “평양시민의 새로운 문화 휴식터가 되고 있다”고 소개하였고, 지난 7월 준공식을 개최한 평양국제비행장(순안국제공항)의 로비 전경을 보여주면서 “조선의 관문, 나라의 얼굴답게 현대적인 모습으로 면모를 일신했다”고 선전함.
 - 그러면서 한 번에 1천 23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동강 유람선 ‘무지개호’를 선전하며 “수도 시민들이 대동강을 유람하면서 즐거운 휴식의 한 때를 보내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이러한 보도를 통해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도 변하게 하는 조선속도 창조의 거센찬 불길 속에 평양과 지방도시들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건축물들이 련이어(연이어) 일떠섰다(세워졌다)”고 자랑함.
- “부실 기업소 北간부, 돈주에게 수천달러 받고 건물 임대”(12/22, 데일리NK)
 - 데일리NK는 22일 소식통을 인용하여 “최근 평양시를 비롯한 각 지역에

돈주들이 운영하는 외화벌이 기업소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외화벌이 신설 기업은 시내 공장기업소 책임간부들과 결탁해 건물 일부를 임대받아 같은 건물 안에서 ‘동거살이식’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함.

- 소식통은 “돈주들은 간부들에게 일정한 돈을 바치고 국가소유의 기업소 건물을 임시로 빌려 자신만의 기업을 운영한다”면서 “과거에는 신규 부지를 승인받아 건물을 지어 기업을 운영했지만 보다 저렴하고 시간이 절약할 수 있는 기존 국가 건물을 임대받아 기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고, “국영 기업소 간부들이 개인 돈주에게 돈을 받고 건물을 임대해 주는 움직임이 많아지자 각 지방 당 및 행정 간부들이 이와 관련해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면서 “당 및 행정 간부들은 이 같은 임대행위를 불법이라고 엄포를 놓고 돈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일부 간부들은 임대를 대신해주는 거간꾼을 찾아가 임대 건물을 소개해주고 알선료까지 챙긴다”고 전함.
- 그러면서 소식통은 “때문에 국영공장기업소가 차지하는 건물 면적은 현저히 줄어들고 대신 개인이 운영하는 사기업 면적은 점점 확장되고 있다”면서 “공장 간부(지배인, 당 비서)들은 기업운영자금을 구실로 저마다 건물 빌려주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힘.

■ 북한, 고려술·가시오가피약 등 18개 품목 최우수품 선정(12/22,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22일 “2015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최우수 제품들에 12월15일품 질메달을 수여했다”고 밝히면서 “과일빵, 사과단물(주스), 고려술, 낫그릇, 가시오가피약”을 소개함.
- 방송에 따르면 ‘12월15일품질메달’은 북한에서 최우수 상품에 수여하는 품질 인증 기준으로 지난해 4월 제정되었고, 당시 대동강식료공장의 ‘평양주’가 최초로 이 메달을 수여한 이후 올해는 선홍식료공장에서 생산한 과일빵, 영양단묵(젤리), 종합영양강정과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에서 만든 사과단물을 비롯해 모두 18가지 제품이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됨.
- 이어 방송은 대동강식료공장과 강계포도술공장의 고려술, 인풍술을 비롯해 강계 고려약가공공장의 가시오갈피엑스·삼지구엽초엑스 등 고려약들도 최우수 품에 선정되었으며, 함께 선정된 경질유리그릇과 신선로, 낫국수그릇, 낫밥 그릇, 낫수저에 대해서는 “질도 좋고 쓰기에도 편리한 명제품”이라고 찬사를 보냄.

- **北관광총국장 “비행기·스키관광 유럽 관광객에 호평”(12/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북한 홍인철 국가관광총국 국장이 “올해 조선에서 관광 활동에 매우 불리한 요인들이 작용했지만, 외국인 관광이 지난해에 비해 활성화됐고 이런 노력은 우리나라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세계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고 주장했음을 보도함.
 - 홍 국장은 이에 “국가적 관광 장려 정책에 따라 입출국 수속을 간소화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요구를 원만히 실현시켜줬으며 다양한 관광 상품도 유럽 관광 시장에 내놓았다”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 배경을 설명하고 “에볼라 비루스(바이러스) 방역과 관련해 3월 중순부터 관광이 시작됐다”면서 “적대 세력들의 무모한 정치군사적 도발로 나라에 준엄한 정세가 조성됐던 지난 8월에도 관광은 중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히 “비행기관광, 마라톤, 자전거, 스키, 낚시, 과일따기, 나무심기, 천막 및 등산 관광 등 다양한 항목의 관광 일정들이 유럽 관광객의 호평을 받았다”고 평가함.

- **북 농민, 쌀값 하락에 생활고(12/24,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4일 소식통을 인용하여 가을철 들어 하락하기 시작한 북한의 식량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농민들과 폐기밭 농사에 의지해 살아가던 주민들의 생활형편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도함.
 - 소식통은 “장마당에서 통강냉이 1kg은 중국인민폐 1위안, 입쌀은 중국인민폐 3.5위안”이라며 “가을부터 내리기 시작한 식량가격이 고정된 상태에서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올해 8월까지 통강냉이 kg당 중국인민폐 1.8위안, 입쌀 6위안이던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싼) 가격인데 여기에 비하면 북한의 생필품들은 해산물을 제외하고는 값이 오르거나 그대로라고 설명함.
 - 특히 소식통은 북한 북부 국경지역은 11월 27일 폭설이 내린 후 석탄 1톤에 중국인민폐 400위안, 땃감용 나무는 한 입방에 중국인민폐 150위안까지 올라갔으며 겨울철 한 가정에서 아무리 땃감 나무를 적게 사용한다고 해도 3.5입방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땃감용 나무 3.5입방을 살려면 장사꾼들에게 넘기는 가격으로 입쌀 2백kg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렇게 기초적인 생필품조차도 쌀을 팔아 구입해야 하는 농민들은 생계를 유지할 위해 아까운 식량을 헐값으로 내다 팔고 있다”고 강조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러 전문가들, 북한 발전소 현장 실사(12/21,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1일 주 북한 러시아 대사관의 말을 인용하여 러시아의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북한을 방문했다고 보도하며, 발전 분야 기술자인 이들이 동평양 화력발전소와 평양 남강 수력발전소 그리고 함경남도 금야 수력발전소 등을 직접 둘러봤다고 전함.
 - 방송은 현재 논의중인 러시아의 대북 전력 생산공급을 위한 현장 실사 성격의 이번 방문에서 러시아의 대북 발전설비 공급 방안이 중점 논의되었으며, 북한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 측에 북한의 전력생산 현황과 전기공급 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함.
 - 또한 이를 토대로 양 측은 기존 발전시설의 전기생산 능력 향상 방안과 송전 과정에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러시아 대사관은 북한 기술자들이 현지 발전소 설비체계의 문제점에 관해 솔직히 털어냈다고 방송은 덧붙임.

- 독일 정부, 북한 재난감소사업 83만 달러 지원(12/21,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독일 정부가 독일 민간 구호단체 ‘벨트홍게르힐페’, 세계기아원조의 북한 지원 사업에 미화 83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21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독일 외무부는 이 자금을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촌 지역에서 재난 감소사업을 실시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재난에 취약한 지역에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현지 관리들을 교육하고 재난 방지책을 세우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함.
 - 또한 이 지원금은 황폐화된 산림 복구를 위해 경사지에 나무를 심고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 외에 농촌 지역에 관개수로를 설치하고, 우물을 파주며, 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방송은 전함.

- “북중 합작 트럭 조립회사, 연간 2만대 이상 조립”(12/22, NK뉴스)
 - NK뉴스는 북한의 무역잡지 ‘북한의 대외무역’(Foreign Trade of DPRKorea) 최근호를 인용해 “금평자동차는 트럭 조립라인과 부품용 대형창고 등을 갖춘 현대식 시설에서 트럭을 연간 2만 대 이상 생산하고 있다”면서, 만일 이 잡지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금평자동차의 생산량은 남북이 합작해 남포에 만든 ‘평화자동차’의 자동차 생산량보다 많은 것이라고 설명함.

- 뉴스는 평화자동차의 한 해 생산량이 1천 600여 대인데, 금평자동차는 자동차 생산 공장이라기보다 중국에서 차체와 부품만 가져다 단순 조립하는 회사로 보인다고 덧붙임.

■ “유엔, 올해 북한 홍수 대응 10만 달러 지원”(12/22,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2일 국제적십자사(IFRC)의 발표를 인용하여 유엔이 북한 홍수 피해에 대응해 10만 달러를 특별 지원했다고 보도함.
- 방송은 국제적십자사가 ‘북한 홍수 피해 보고서’에서 세계식량기구(WFP)와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인구기금(UNFPA), 식량 농업기구(FAO)등 5개 유엔 기구가 국제사회에 긴급지원을 호소해 모금된 금액을 북한 수재민에 지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전함.
- 방송에 따르면 유엔은 이 자금으로 수재민들에게 긴급 거처를 마련해주고 식량 외의 구호물자를 제공했으며, 수재민 1만 1천여 명에게 고열량 영양 비스킷과 보건의료세트, 11개 소학교와 고등중학교에 학용품, 여성 3천여 명에게 속옷과 여성용품 등을 지원하고 수질정화제와 수질정화 장비, 위생용품 등도 지원함.

■ “北, 에스토니아서 고급가구용 원목 수입”(12/24,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4일 북한이 북유럽의 에스토니아로부터 원목을 수입했다고 보도하면서, 에스토니아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국가별 교역 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에스토니아로부터 수입한 전나무 원목은 지난 10월 기준 3만 8천 336유로(약 5천만 원)였다고 덧붙임.
- 방송은 북한이 이보다 한 달 앞선 지난 9월에도 11만 1천 407유로 어치의 전나무 원목을 수입했는데, 2006년 에스토니아로부터 3 만6천 833유로 규모의 종지와 판지 등을 수입한 적이 있지만 원목 수입은 사실상 올해가 처음이라고 밝힘.

■ “러시아, 북한에 사료용 건조 첫 수출”(12/25, 스푸트니크 방송)

- 러시아 스푸트니크 방송은 러시아가 북한에 사료용 건조를 처음으로 수출했다고 25일 자국 관세청과 화물운송회사 ISC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이 회사가 “지난 11월 극동 철도를 통해 528t 가량의 연해주 건조를 북한 농업 회사로

운송했다”고 밝혔음을 전함.

- 방송은 이 화물이 러시아 프리모르스키시 시비리체보 역에서 출발하여 북러 접경지역 철도역인 하산을 통과해 평양에 도착했다고 설명함.

- 2015년에 “전국적인 발명 건수가 지난해 대비 111% 이상 증가” 선전(12.24, 중앙방송)
- 오산덕상 체육경기대회 폐막식, 12월 25일 ‘로두철’(국가체육지도위 부위원장인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등이 참가한 가운데 빙상관에서 진행(12.25, 중앙통신)
- 원산청년발전소, 연간 전력생산 계획을 113% 초과 완수(12.25, 중앙방송)
- 평안북도 창성군 은덕원과 인민병원 개원식, 12월 25일 김능오(평안북도당 책임비서, 개원사)·장준상(보건성 부상)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12.26, 중앙방송)
- 양강도 대흥단군, 2015년 감자 생산 계획 129% 초과 달성(12.26, 중앙방송)
- 중앙공업부문 115%·지방공업부문 110% 등 올해 식료일용공업부문 연간 인민경제 계획 초과 수행(12.27, 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北매체 “세·네쌍둥이 출생은 나라의 경사”(12/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올해 평양산원에서 12쌍의 세쌍둥이, 네쌍둥이 출생’이란 글에서 “세쌍둥이, 네쌍둥이의 출생이 한 가정의 기쁨으로, 온 나라의 경사로 되고 있다”며 평양산원의 세·네쌍둥이 출산 소식을 보도함.
 - 신문은 “지난 1월 16일 남포시의 김혜경 여성이 올해의 첫 세쌍둥이를 낳은 것으로부터 평양산원에서는 김형권군의 세쌍둥이와 개천시의 세쌍둥이, 강계시의 세쌍둥이 등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11쌍의 세쌍둥이가 태어났다”고 소개하면서, 지난달 3일 함경북도 청진시에 사는 리봄향 여성이 낳은 네쌍둥이까지 합하면 올해 12쌍의 세쌍둥이, 네쌍둥이가 태어났다고 전함.
 - 이어 신문은 이들 쌍둥이를 낳은 산모와 아기들을 평양산원에서 특별 관리하고 있다고 선전하며 “산모들은 한 달 동안 평양산원에서 보약을 써가며 건강관리를 보장받고 아기들은 몸무게가 4kg이 될 때까지 국가가 의무적으로 키워준다. 그 모든 비용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평양산원에는 현재 황해북도 중화군과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온 2명의 여성이 세쌍둥이 임신으로 확인돼 입원,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 시장 관련

- “위성사진으로 확인된 北합법시장 400개 넘어”(12/24,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4일 북한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커티스 멜빈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의 발표를 인용하여, “위성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올해 (북한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합법적 시장의 확대”라며 “합법적 공식 시장의 수가 400개가 넘는다”고 보도함.
 - 멜빈 연구원은 ‘위성사진으로 본 김정은 시대 특징’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나선시 경제무역지대를 비롯해 황해북도 사리원, 강원도 원산 등 전국적으로 새로 생기거나 확장한 시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함.
 - 분석에 따르면 북한 전역에 걸쳐 물놀이장과 영화관 같은 유희·오락 시설이 많이 건설되었으며, 특히 스케이트 공원은 전국적으로 50개 이상이 새로 생겼고 평양을 비롯한 전국에 6개 이상의 초호화 현대식 시설의 애육원과 보육원이 건설된 상황임.

- 정보당국 “北 장마당 하루 100만~180만 명 이용”(12/27, 연합뉴스)
 - 북한에서 장마당을 이용하는 주민이 하루 100만~1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이 27일 추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에서 장마당은 전국적으로 총 306곳으로 늘어나면서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았으며, 지역별로 보면 평안남도 37곳, 함경남도 36곳, 평안북도 34곳, 황해남도 33곳, 황해북도 32곳, 함경북도 28곳, 강원도 26곳, 자강도 24곳, 평양직할시 23곳, 양강도 18곳, 남포특별시 10곳, 나선특별시 5곳 등의 순이라고 뉴스는 전함.
 - 이어 정보당국은 “북한은 2009년 화폐개혁 때 장마당을 폐쇄했다가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 등으로 주민 반발이 커지자 2개월 만에 재허용했다”고 설명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처형까지 해도 北주민, 南드라마 시청 막을 수 없어”(12/22, 데일리NK)
 - 데일리NK는 22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올해는 한국 드라마를 팔거나 빌려주는 사람, 시청 중 적발되는 경우에도 총살까지 한다는 국가안전보위부 엄포가 있었지만 주민들의 남한 드라마 시청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존에는 단순 흥미로 한국드라마를 보았다면 지금은 드라마 속 남한과 북한의 현실을 비교하며 평가하기도 한다”고 덧붙임.
 - 그러면서 “보위부 간부들도 남한 드라마 시청을 보호해주거나 눈감아 주고 뇌물을 받아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이들도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남한을 동경하거나 통제가 심한 북한 사회에 대해 불만을 갖기도 한다”면서 “물론 이러한 불만이 체제를 뒤 엮을 정도로 심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뿐 아니라 간부들도 체제에 대한 반감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강조하였고, “젊은이들 중심으로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문화가 이미 오래전에 형성 돼 있어서 당국은 강력한 처벌로 단속과 통제를 하려고 하지만 드라마가 주는 활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드라마 시청을 막을 수 없다”고 전함.

마. 사회 동향

- “북한, 오토바이 개인소유 금지 1년4개월만에 해제”(12/25,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지난해 7월 금지했던 오토바이의 개인 소유를 지난달 다시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25일 보도함.
 - 한 소식통은 RFA에 “오토바이의 개인 소유를 금지했던 북한 당국이 11월 초부터 인민보안부를 통해 소유 금지를 해제했다”고 말함.
 - 이 소식통은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주민이 오토바이를 살 때 상당한 돈을 내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내놓았다”면서 “인민보안부 산하 군인상점들에서 판매되는 오토바이는 이전의 시장가격에 비해 훨씬 비싸지만,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국가 인증서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함.
 - 그는 이어 “군인상점에서 판매되는 오토바이 상당수는 겉으로는 우리나라(북한) 제품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산에 평양의 '보통강'이란 상표만 갖다 붙인 것”이라고 덧붙임.

- 북한 “올해 역기·사격 등 국내 신기록 19개 수립”(12/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4월)와 보천보화불상체육경기대회(6월), 공화국선수권대회(9~11월)에서 19개의 공화국 새 기록이 수립됐다”고 보도함.
 - 신기록이 가장 많이 나온 분야는 역기로, 남자 85kg급 인상·용상·종합, 여자 48kg급 용상·인상, 여자 75kg 이상 급 인상 등의 종목에서 종전 북한 최고기록을 경신했다고 통신은 전함.
 - 통신은 남자 94kg급 경기에 출전한 리준 선수가 4월 용상에 이어 11월 인상 종목에서 신기록을 세웠다고 전했다지만 새 기록이 정확히 몇 kg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또 50m 소총 3자세 여자 개인 및 단체, 50m 러닝타겟 혼합 남자 단체, 클레이 스키트 등의 종목에서 신기록이 나왔으며, 수영(여자 4X100m 혼합계영, 50m 배영), 육상(해머던지기), 스피드스케이팅에서도 종전 기록을 경신하는 새 기록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 북 어민들 마약중독 심각(12/23,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3일 소식통을 인용하여 “바다에서 일어나는 조난 사고는 대부분 마약과 관련이 있다”며 “어민들에게 있어서 마약은 술보다 보관이 간편한데다 효과와 지속성도 더 강해 조업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품”이라고 전하면서, 최근 일어난 잦은 해상사고가 이러한 마약중독과 관련되었을 것이라고 보도함.
 - 이어 방송은 해상 조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당국은 2010년부터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이 술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자 대체 수단으로 마약을 찾게 되었다고 전함.
 - 이와 관련하여 소식통은 “예전에 어민들은 하루 어로활동을 위해 한 사람당 보통 여름철에 40%짜리 술 한 병, 추운 겨울철에는 술 세병을 준비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필로폰이 술을 대신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필로폰은 한번 흡입하면 24시간 효력이 지속되는데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몽롱한 상태에서 조업을 하던 어민들은 조난을 당하기 쉽다고 덧붙였다.

- 北美체 “선수 28명 내년 하계올림픽 출전 자격 획득”(12/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올림픽참가를 위한 올해의 치열한 경쟁 끝에 조선선수

28명이 입장권 획득'이란 글에서 "11월 말 현재 조선 선수들 속에서 28명이 (내년 하계) 올림픽 참가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힘.

- 통신은 최근 3개월간 세계역도 선수권대회와 세계기계체조 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에서 10여 명이 올림픽 '입장권'(출전권)을 획득했으며 내년에도 유도, 권투 등 여러 종목에서 선수가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하였고, 특히 아시아 강팀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여자축구팀과 내년 아시아축구연맹 23살 미만 선수권대회 본선에 진출한 남자축구팀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통신은 보도함.
- 그러면서 통신은 "북한 선수들은 역대 하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14개를 포함해 모두 47개의 메달을 땀다"면서 이들 가운데 김일(레슬링)이 금메달 2개(1992년, 1996년), 계순희(유도)가 금메달(1996년)과 동메달(2000년), 은메달(2004년)을 각각 획득해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고 덧붙임.

■ 북한, 올해 10대 최우수선수 선정 발표(12/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조선에서 올해 체육사업정형총화회의 진행'이란 글에서 "올해 체육사업정형총화회의가 2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며 "회의에서는 2015년 조선(북한)의 10대 최우수선수, 감독, 태권도 선수들이 발표되었다"고 보도함.
- 이날 회의에서 선정된 10대 최우수 선수는 엄윤철·리성금·김명혁·림정심·최효심(역도), 라은심·리명국(축구), 김국향(수영), 리세광(기계체조), 윤원철(레슬링) 등임.

■ 북한, 국가표창 수여식...김일성 훈장에 차종범·김복남(12/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올해 한 해 공을 세운 과학자와 노동자, 군인들에게 표창을 주는 2015년 국가표창 수여식을 25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일성 훈장은 차종범·김복남, 김정일 훈장은 최용, 노력영웅 칭호와 함께 금메달·국기훈장 제1급은 리천수·양문상 등 10명에게 수여됐다고 통신은 전함.
- 김일성상은 김영희, 김정일상은 최성천, 김일성의 이름이 적힌 시계표창은 조석철·오철시 등 14명, 김정은 표창장은 김문철·김천웅 등 23명 등에게 주어짐.
- 북한은 또 국기훈장 제1급은 오수남·리상섭·리인철 등 54명, 국기훈장 제2급은 25명에게 수여함.

- 이날 수여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기남·최태복·김평해 노동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함.

- 11월말 현재 北 선수 28명의 '제31회 올림픽 참가 자격 획득 및 역대 하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14개 포함 47개 메달 획득' 선전(12.24, 중앙통신)
- 오산덕상 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경기, 12월 24일 핸드볼 남자팀과 4.25여자팀이 우승한 가운데 종료(12.26, 중앙통신)
- 조선축구협회, 2015년 최우수 남·여 축구선수로 리명국(평양체육단)과 라은심(압록강체육단) 선정(12.26, 중앙통신)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특이사항 없음.

나. 미·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중·북 관계

- “북한, 모란봉악단 철수 ‘사과’ 특사 중국에 파견”<日언론>(12/23,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달 초 있었던 모란봉 악단의 갑작스러운 철수를 사과하기 위해 각료급 특사를 최근 베이징에 보냈다고 니혼게이지가 신문이 칼럼에서 23일 보도했음.
 - 이 신문은 나카자와 가쓰지(中澤克二) 편집위원의 기명칼럼에서 북·중 관계를 잘 아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 “김정은이 아주 최근 (시진핑 지도부에) 사과하기 위해 각료급 인사를 베이징에 보냈다.”고 전했으며, 또 북한은 “내년에 모란봉악단을 다시 중국에 보낼 계획”이라고 전하고 시기는 36년 만에 내년 5월 열릴 예정인 조선노동당대회 이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니혼게이지는 이를 통해 북·중 우호분위기를 다시 고조시킨다는 게 김정은의 의도라면서 모란봉악단의 중국 방문과 동시, 또는 조금 사이를 두고 김정은 자신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난다는 시나리오라고 전했음.

라. 일·북 관계

- “北·日, 최근 한 달간 중국서 남북자관련 3차례 비공식 협의”(12/21, 연합뉴스)
 - 북한과 일본이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3차례 걸쳐 중국에서 납치 문제 관련 비공식 협의를 개최했지만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했으며, 가나이 마사아키(金井正彰)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 과장은 11월

중순과 하순 상하이에서 이달 중순 다롄(大連)에서 북한 당국자와 만났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 가나이 과장은 일본 정부가 공인한 납치 피해자 12명의 안부 정보를 포함한 납치 재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북측은 “일본이 말하는 12명 중 8명은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입국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소개했다. 그러면서 북측은 태평양 전쟁 종전을 전후해 한반도에서 숨진 일본인 유골 반환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했다.

마. 러·북 관계

- “러시아, 북한에 사료용 건조 첫 수출”<러 방송>(12/25, 연합뉴스)
 - 러시아가 북한에 사료용 건조를 처음으로 수출했다고 러시아 스포트니크 방송이 25일 자국 관세청과 화물운송회사 ISC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회사는 이날 자료를 통해 “지난 11월 극동 철도를 통해 528t 가량의 연해주 건조를 북한 농업 회사로 운송했다.”고 밝혔다.
 - 화물은 러시아 프리모르스키시 시비리체보 역에서 출발, 북·러 접경지역 철도역인 하산을 통과해 평양에 도착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바. 기타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 친한 파 의원 “한국 모범적 민주국가, 한·미 동맹은 진정한 혈맹”(12/21, 연합뉴스)
 - 의회 내 대표적 친한 파 의원인 마이크 켈리(공화·펜실베이니아) 연방하원의원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서’라는 글에서 “한국은 전쟁의 잣더미 속에서 세계강국이자 모범적인 민주국가, 존경받는 리더로 부상해왔고, 한·미 양국은 지난 60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를 방어하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해 왔다. 우리의 동맹은 진정한 혈맹이다.”라고 했다.

- 그러나 그는 “한·미 동맹은 북한 독재정권의 위협에 의해 시험을 받고 있으며 그들은 비인간적인 이념을 따르는 잔인한 정권인 만큼 우리는 항상 모든 도발과 침략 행위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며 “미사일, 핵실험, 사이버 공격 등 한반도 불안을 초래하는 북한의 그 어떠한 도발 시도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확고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특히 켈리 의원은 “양국은 공동 핵심가치에 따라 역내 신뢰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외교’를 목표로 한 박 대통령의 노력은 평가받아야 하며,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신뢰구축 과정은 한반도 내 긴장을 완화하는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음.

나. 한·중 관계

- 아사히 “中, 2년 전 자국기업 거제도 부두임차 韓국방부에 타진”(12/21, 연합뉴스)
 - 중국이 2013년 거제도의 항만시설을 자국 기업에 장기 임대해달라며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했음. 2013년 봄 중국 측이 ‘거제도에 있는 부두 중 하나를 장기간 중국 기업에 임대할 수 없겠는가?’라며 청와대와 국방부 루트로 문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중국 측의 이 같은 요구는 한국 국방부의 강한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으며, 항만시설 사용을 희망한 것은 중국 기업이었지만 배후에 중국군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는 추정했음.
 - 이와 관련, 남중국해-말라카 해협-인도양-페르시아만으로 이어지는 해상 교통로에 있는 각국의 항만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해상 패권을 도모하는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이 한반도에까지 미치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일본 측에서 제기됐다고 아사히는 소개했음.
- 한·중 7년 만에 EEZ협상…“매우 어려운 협상” 장기전 확인(12/22,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은 22일 서해상에서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획정하기 위한 제1차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열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해 앞으로 추가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됨.
 - 조태열 외교부 2차관과 중국 류진민 외교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측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30분에 걸쳐 회담을 진행한 끝에 앞으로 차관급

회담을 연 1회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국장급 실무회의와 전문분과회의를 병행하기로 합의했음.

- 조 차관은 회담 후 해양경계획정의 법적·기술적 어려움을 거론하며 “매우 어렵고 중요한 협상으로, 한두 번의 협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오늘 회담에서 우호적이고 실무적이며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음.

다. 한·일 관계

- 유흥수 주일대사 “한·일 양국관계 어두운 터널 출구에 있다.”(12/22, 연합뉴스)
 - 유흥수 주일본 한국대사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두운 긴 터널의 출구에 와 있다는 느낌”이라고 22일 말했으며, 이날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 주최로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재일동포 미래창조 포럼’ 강연에서 “좀 있으면 밝은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나올 수 있다.”며 한·일 관계를 진단했음.
 - 그는 수교 50주년 기념일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각각 상대국 기념행사장을 방문한 것, 아베 담화에 역대 담화를 계승한다는 뜻이 반영됐고 한국 정부가 이에 절제된 반응을 보인 일, 현 정부 첫 한·일 정상회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판결이 한·일 관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규정했음.
 - 유 대사는 한국과 일본이 이와 같은 네 차례의 고비를 잘 넘겼다고 평가하고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내년이 되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한국 전쟁 동안 일본이 물자공급 기지로서 전쟁 특수를 누렸고 한국은 수교 이후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협력자금과 기술 지원을 토대로 성장했다고 설명하고서 양국이 “서로 도우면서 살아왔고 서로 필요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 수교50년 기로…한·일 청구권협정 헌법소원 선고에 日언론 ‘축각’(12/22, 연합뉴스)
 - 일본이 징용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한·일 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임박함에 따라 일본 언론이 축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일본 언론은 한·일 청구권협정 2조 1항 등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

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3일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한 소식을 일제히 보도하면서 현재의 판단이 미칠 파장에 주목했음. 교도통신은 “위헌 판단이 나오는 경우 일본에 대해 협정 개정 등을 요구할 의무가 한국 정부에 생긴다.”며 양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전했다.

- 마이니치신문은 2012년 한국 대법원이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을 계기로 하급심에서 일본 기업으로 하여금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이어지는 것을 거론하며 현재의 결정에 따라서는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음.
-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가운데 3건이 현재 한국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현재의 판단이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으며, 산케이신문은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반세기 전에 합의한 일본의 한반도 통치 청산 방식이 일방적으로 뒤집히는 것이 된다.”고 보도했음.

■ “야스쿠니 폭발음 韓용의자 日재입국시 반입한 가루서 화약성분”(12/22, 연합뉴스)

-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과 관련해 일본에서 구속 수사를 받는 한국인 전모(27) 씨가 일본에 재입국할 때 반입한 가루에서 화약성분이 검출됐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전씨가 이달 9일 김포공항을 출발해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위탁 수화물로 보낸 가방 속에 있던 분말 형태의 가루에서 흑색 화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음.
- 니혼게이지아이신문은 전씨가 재입국할 때 반입한 가루의 양이 약 1.8kg으로 여기에 흑색 화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전했으며, 검은 가루가 지난달 23일 폭발음 사건이 발생한 야스쿠니 신사의 화장실에서 발견된 것과 같거나 비슷한 성분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에 따라 전씨에게 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성은 이날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항공보안 당국에 전 씨가 반입하려 한 물질에 대한 감정 결과를 제공하고, 국제 규정에 따른 철저한 항공 보안 검사를 요청했으며, 김포공항에서 화약 지참을 막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도 정보 제공을 요구했음.

- **외관방장관 “위안부 협의 ‘곧 마무리’ 보고받은 적 없어”(12/24,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간의 교섭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에 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24일 반응했음.
 -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의에서 결론이 보이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런 상황에 관해서 나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음.
 -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전날 서울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 문제에 관해 “좀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나름의 결과를 보고드릴 시점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으며, “정부의 입장은 일한 사이의 재산 청구권 문제는 일한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표명했음.

- **산케이·청구권 판결에 혼풍?...외고위관료 “한·일 관계개선 흐름”(12/24, 연합뉴스)**
 - 산케이 신문 기자에 대한 무죄 선고와 한·일 청구권협정의 위헌성 판단 회피 등 최근 이뤄진 한국 사법부의 두 결정을 계기로 일본 정부와 언론의 한국 관련 기류에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음. 한국의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판단이었지만 일본 주요 언론은 한·일 관계개선을 바라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음.
 - 일본정부, 현재 판단 환영...“현안 타개에 힘 쏟을 전망” = 24일자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판단이 나온 23일 “한·일에 박힌 가시가 또 하나 빠져 관계 개선의 흐름이 한층 강해졌다.”고 말했음. 가와무라 야스히사 일본 외무성 외무보도관(대변인)도 “양국에는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관계 전진을 위해 쌍방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 위안부 협상 진전에 기대감 =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의 미묘한 개선 흐름이 당면 현안인 군위안부 문제 진전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음. 요미우리는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과 ‘이미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사이에 갈등 해소는 쉽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 측이 여러 번 다시 문제를 제기한 역사에 중지부를 찍겠다는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 日, 한·일 장관회담 일부러 미리 흘렸나...‘아베 의지’ 프레임 짜기(12/25, 연합뉴스)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논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 회담 개최가 양국 사이에 완전히 조율되기 전에 일본 측에서 먼저 공개된 배경이 주목되고 있음. 24일 일본 언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목표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에게 한국 방문을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 추진 사실을 보도했음.
 - 양국 정부의 협의에 따라 열리는 외교장관 회담임에도 아베 총리의 의지를 강조하는 극히 이례적인 시각에서 보도한 것이며,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일본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됨. 결과적으로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식의 프레임이 형성됐으며, 일본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자국이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성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부각한 것임.
 - 한국 정부 내에서는 구체적인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외교장관 회담 구상이 일본 언론을 통해 먼저 흘러나온 것에 당혹스럽다는 반응과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언론 플레이’이므로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외교장관 회담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등 정공법을 택하겠다는 방침임.

- 日 ‘10억 원대 위안부 기금 아베 책임통감 언급’ 패키지 던진다(12/25,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10억 원 이상 규모의 새 기금을 설립하고, 아베 신조 총리의 ‘사죄’ 및 ‘책임 통감’ 등을 담은 메시지를 내는 등의 군위안부 문제 타결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 일본 정부는 합의가 도출되면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약속을 받겠다는 방침임.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은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해 향후 도출될 합의 문서에 합의가 ‘최종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명기하자고 요구할 예정이며,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군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할 것, 군위안부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할 방침임.
 - 일본은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략적인 타결이 되면 내년 박근혜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조기에 성사시켜 정식 합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합의에 대한 환영 메시지를 내거나, 정상회담에 입회를 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국을 개입시키려는 것이 일본의 구상으로 알려졌다.

- 또 미국을 개입시키려는 일본의 구상은 한·미·일 공조 복원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해온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측면과 국제적으로 아베 총리에게 씌워진 ‘군위안부 부정론자’의 이미지를 바꾸는 측면 등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됨.

■ 日외무상 “위안부문제 최대한 조율…아베 총리 지시 여러 번 받아”(12/25, 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서울에서 열릴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대해 “위안부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무엇이 가능한지 최대한 조율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양국의 현안을 다루는 회담을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28일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오후 4시13분께 일본 외무성에서 기자들에게 밝히고 이같이 언급했음.
- 기시다 외무상은 아베 총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는 물음에 “올해 11월 정상회담 이후 여러 번 지시를 받아왔다. 그것을 토대로 외교 당국으로서 여러 수준에서 노력해 왔다.”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방한한다.”고 답했음.

■ “日, 내년 3월 美서 한·일 정상회담 열어 위안부 합의발표 검토”(12/27,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이 오는 28일 외교장관회담(서울)에서 군위안부 문제에 합의를 도출하면 내년 3월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공동 문서를 발표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음.
-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내년 3월 31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개최, 군위안부 문제의 최종 타결을 확인한 뒤 공동 문서를 발표하는 방안임.

■ 후쿠다 전 日총리 “위안부문제 결정에 양 국민 지지 필요”(12/27, 연합뉴스)

- 후쿠다 전 총리는 26일 한·일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서울 시향과 도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합동콘서트가 열린 도쿄도 소재 ‘분카무라 오차드홀’에서 기자와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타결 방안이 나오면 “그 결정에 관해서 (한국과 일본 양쪽) 국민이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후쿠다 전 총리는 “양국 국민이 이런 것(위안부 문제 등)을 극복하고 더 큰 목표

를 향해 나가도록 분발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수년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이 마치 거짓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고 소망을 피력했음.

- 日 “군위안부 기금에 한국도 출자하라”…책임 ‘물 타기’ 노리나(12/27, 연합뉴스)
 - 일본이 군위안부 해법 차원에서 검토 중인 기금 설립안과 관련, 일본 정부가 출자할 뿐 아니라 한국 정부에도 기부를 요구해 공동으로 기금을 만드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7일 보도했음.
 - 피해자들이 한국에 있는 만큼 일본이 설치할 기금에 한국 정부가 일정한 관여를 할 수는 있지만 ‘공동기금’ 구상은 일본의 책임에 ‘물 타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일본 언론에서 잇달아 보도된 기금의 규모 논란 역시 문제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어 보임.
 - 일본 정부가 협상 타결 전 기금 규모를 둘러싼 견해 차이를 자국 언론에 알린 것은 핵심인 ‘국가 책임’ 보다 ‘돈 문제’로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한국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는 인식을 일본 사회에 확산시킴으로써 문제 해결에 대한 일본 여론의 저항감을 키울 소지도 없지 않아 보임.

- “일본, 위안부 합의조건으로 ‘한·일 청구권협정 재확인’ 요구”(12/27,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군위안부 문제의 타결 조건으로 한·일 청구권협정(1965년)이 유효하다는 점을 문서로 확약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7일 보도했음. 신문에 의하면 일본은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하고 청구권협정을 재확인한다는 2가지 사항을 문서로 확인하라는 요구하고 있음.
 - 한·일 청구권협정 재확인 요구는 결국 1965년 체결된 협정으로 재산과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며, 이는 군위안부에 대해 일본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中 외교부장, 미 국무장관에 “中 핵심이익 존중” 촉구(12/21, 연합뉴스)
 - 2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키프로스를 방문 중인 왕 부장은 전날 케리 장관과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중국과 협력을 추구할 때 중국의 핵심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중국의 단호한 입장도 밝혔다.
 - 그는 미국을 향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군함 및 군용기를 중국의 난사군도(스프래틀리 제도) 인근 해역에 파견해 무력을 과시하는 것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케리 장관은 왕 부장에게 “미국은 중국의 관심사를 신중하게 다루길 원한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간 3개 공동성명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 케리 장관은 “미국은 양국 협력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에 대해 중국과 진지하게 논의하길 원하며 이를 통해 양국 협력의 추세를 보호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시리아 평화정착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란 핵 합의안의 이행 상황을 설명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 “오바마, 아세안 국가와 정상회의 조율”…중국 견제 나서나(12/21,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이르면 내년 2월 정상회의를 하려고 조율 중이라고 니혼게이지(닛케이)이 21일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랜초미라지의 휴양지 서니랜즈를 회의 장소로 검토하고 있다고 미 정부의 고위관리가 말했다.
 - 서니랜즈는 오바마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회동(2013년)하는 등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장소로 회담 추진을 향한 미국의 의지가 엿보인다고 닷케이는 평가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아세안 내부 결속을 다지고 이들 회원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중국을 견제하는 계기로도 삼을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음. 닷케이는 중국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아세안 국가 간 온도 차가 있다고 전제하고서 오바마 대통령이 남중국해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동규범(COC)을 만드는 것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했음.

- 미국 내년에 남중국해 초계작전 강화...중국과 마찰 고조 전망(12/22, 연합뉴스)
 - 지난 10월 말 구축함 라센함(DDG 82)을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수비 환초(중국명 주비자오) 12해리 이내 해역에 진입시켜 초계작전을 한데 이어 다시 지난달에는 인공섬 부근 상공에 B-52 전략폭격기를 근접시켜 중국과 신경전을 벌인 미국이 내년에도 중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군사 전문지 네이비타임스 등 미 언론은 해군 소식통들의 말을 빌려 미국이 공해(公海)에 보장하는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 남중국해에 대한 해군 함정과 항공기에 의한 정기적인 초계작전을 늘릴 계획이라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미국, 중국 반테러법안 심의에 '심각한 우려' 표명(12/23, 연합뉴스)
 -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전인대)가 연내 통과를 목표로 반(反)테러법안 심의에 들어가자 미국 정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BBC 방송 중문판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가브리엘 프라이스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이날 “해당 법안은 뜻이 분명하지 않고 모호한 조항이 많다.”면서 “이 법안은 반테러 활동에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으며, “이 법안이 중국의 언론·결사·집회·종교의 자유를 더욱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서 “올해 통과된 ‘국가안전법’이나 전인대에서 심의중인 ‘외국비정부기구관리법안’과 마찬가지로 무익하다.”고 비판했음.
 -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도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해 암호 키와 비밀 코드를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주재국 정부에서 엄격한 안전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반발했음.

- 중국, 미국과 해외 도피 부패관리 송환 협상 나서(12/24, 연합뉴스)
 - 중국이 외국으로 도피한 부패 관리 5명의 송환을 위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를 인용해 24일 보도했음.
 -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국제협력국의 한 관리는 “미국 사법 당국과 양슈주(楊秀珠) 전 중국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 시장을 비롯한 탐관 5명의 송환 협상을 벌이고 있다.”면서 “미국 측이 이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음.

- 미국 국무부 관리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 중국 측과 도피범 송환 협상을 수차례 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기소와 중국 송환의 적법성을 검토 하기 위해 중국 측에 관련 증거를 추가로 요구했다.”고 확인했음.
- 中, ‘反테러법안 비난’ 미국에 발끈…“이중 잣대 적용 말라”(12/24, 연합뉴스)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미국에 반테러 법안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고 중국의 입법 절차를 존중하라고 촉구했음. 앞서 가브리엘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반테러 법안에 대해 뜻이 분명하지 않고 모호한 조항이 많으며 반테러활동에 유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를 끼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음.
 - 홍레이 대변인은 테러 위협이 중국과 인민의 생명,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반테러법안은 테러 차단과 단속에 꼭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특히 테러와의 싸움 자체가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는 반테러 조치와 인권보호에 균형을 맞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역설했음. 그는 또 인터넷이 테러의 계획과 실행에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미국도 인터넷 운영자와 서비스 업자에 대해 법집행당국에 협력을 강제하는 법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이중 잣대를 들이밀지 말라고 말했다.
- 亞 개발금융 양대 체제 재편…미·중 패권 경쟁 가속화(12/25, 연합뉴스)
 -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25일 공식 출범함에 따라 50년 간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독점해 온 아시아 지역 개발금융 시장이 양대 체제로 재편됐음.
 - AIIB 출범으로 중국의 아시아 금융질서 재편 움직임이 가시화함에 따라 아시아 내 영향력 상실을 막으려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은 출자비율이 30.34%로 압도적인 AIIB의 발족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이 ADB를 통해 주도해 온 아시아 지역 금융질서의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됨.
 -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을 펴는 미국은 아시아 내 중국의 영향력 확산 저지에 나설 가능성이 큼. 미국의 아시아와 세계경제 전문가 린다 름은 최근 싱가포르 일간 아시아원에 기고한 글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AIIB와 TPP가 체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며 “AIIB와 TPP가 회원국에서 배제된 미국과 중국에 이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음.

- 일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자금 지원 등 당근과 경제 블록 제외 등 채찍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줄 세우기에 나서더라도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활동이 아시아 역내를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어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옴.

바. 미·일 관계

- “美, 1983년 KAL 격추 2달 후 ‘蘇, 오인격추’ 견해 日에 표명”(12/25, 연합뉴스)
 - 1983년 9월 소련이 대한항공기를 격추한 사건의 대략적인 진상을 미국이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음.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이 사건이 일어난 지 2개월여 흐른 뒤 미국 정부 고관이 일본 정부 당국자를 만나 ‘소련이 대한항공기를 미국 정찰기로 오인해 소련 영공에서 공해상으로 막 나가려던 참에 격추했다.’고 말한 기록이 공개됐다고 24일 일제히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1983년 11월 14일자로 작성돼 ‘극비’로 분류된 메모는 ‘소련 측은 미국 정찰기 항적(航跡·배나 항공기가 지나간 자취)에 약 15분 후에 들어온 대한항공기를 미국기로 오인했다.’는 미 정부 고위 관료의 발언을 담고 있음.
 - 이 미국 관료는 ‘소련의 레이더 3대 중 1대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소련 측이 오인한 이유를 설명했으며 ‘미사일이 2발 발사됐고 대한항공기가 11분간 나선 형으로 회전하며 급하강 하다가 추락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문서에 기재돼 있음. 하지만 비행기록 장치는 이미 소련이 회수한 상태였으며 미국과 일본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장치를 찾으려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음.
 - 공개된 외교 문서와 관련해 다수의 일본 언론은 미국이 조기에 일본에 상세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평가했으나, 이와 달리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사건 직후 ‘민간 기인 것을 알면서도 공격했다.’고 소련을 비난했는데 실제로는 ‘소련이 미국 정찰기로 오인해 격추했다.’며 거의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해석했음.
- ‘미군기지 갈등’ 日중앙정부-오키나와 소송 전 ‘점입가경’(12/25, 연합뉴스)
 - 오키나와현은 일본 정부가 강행하는 지역 내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이전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음.
 - 오키나와현은 비행장의 이전 대상지인 헤노코(邊野古) 연안 매립 승인을 취소한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지사의 처분을 국토교통상이 불법적으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 미국과 일본 정부는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현 내 헤노코 연안으로 이전키로 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음. 현 기지가 주택가 주변에 있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줬다는 것이 이전 이유였지만 주민들은 기지를 아예 외부로 이전하기를 원했음.
- **日요코타 美공군기지, 수상한 물건 반입 한때 긴급폐쇄(12/27, 연합뉴스)**
 - 일본 도쿄도 요코타의 미국 공군기지에 26일(현지시간) 수상한 물건이 반입돼 기지 전체가 한때 긴급 폐쇄됐음. CNN 방송은 기지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사람이 ‘수상한 물건’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 적발돼 공군기지 측이 즉각 주변을 폐쇄하고 소속 군인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 공군기지 측은 침입자를 체포해 구금한 뒤 기지 폐쇄조치를 해제하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침입자가 누구인지, 또 수상한 물건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

사. 미·러 관계

- **점입가경 트럼프 “푸틴이 언론인 죽였다는 증거 없다.”(12/21, 연합뉴스)**
 - 트럼프는 20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의 프로그램 ‘디스 워크’에 나와 푸틴 대통령을 둘러싼 언론인 살해 의혹에 대신 변론을 펼쳤음.
 - 진행자인 조지 스테파노폴로스는 ‘노바야 가제타’의 탐사전문 기자 안나 폴리트콥스카야가 2006년 살해된 사건을 거론했으며, 활동가들은 러시아 정권이 폴리트콥스카야의 피살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트럼프는 “푸틴 대통령이 기자들을 죽였다면 끔찍한 일”이라며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으며 이는 총을 들고 서서 잘못을 수궁하고 살인을 시인하는 상황과 다르다.”고 반박했음. 그는 이어 “푸틴이 누굴 죽였다는 것은 입증된 적이 없다.”며 “기자들을 죽였다는 증거가 없는데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 **미국 석유회사 코노코, 러시아서 철수…저유가·정치 불안 때문(12/23, 연합뉴스)**
 - 미국의 거대 석유·가스 기업 코노코필립스가 러시아에서 완전히 철수했음. 22일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CNN머니 등에 따르면 이 회사는 러시아 북서부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조인트벤처 폴라라이츠의 지분 50%를 매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 폴라라이츠 지분 매각으로 러시아에서 사업을 완전히 접은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회사가 러시아에서 철수한 것은 유가 급락과 정치적 긴장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분야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라고 FT는 전했다.

■ 미국 재무부, 우크라이나 사태관련 러시아 추가 제재(12/23, 연합뉴스)

- 미국이 우크라이나 내전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인 12명과 러시아 기업 또는 단체 22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22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에서 기존에 발효됐던 제재를 회피하려 시도했던 개인이나 단체, 공공 자산을 유용한 전직 우크라이나 정부관리 등을 새로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 재무부는 이어 이번 조치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을 찾으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지난 6일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방문했을 때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민스크 평화협정이 완전히 이행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우크라이나 정부의 통제할 때까지” 대러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아. 중·일 관계

■ 中-日 고속철 수주 경쟁 점입가경…아시아 패권 ‘대리전’(12/21, 연합뉴스)

- 세계 각국의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벌이는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 중국은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해온 50억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반둥(150km) 고속철 사업 수주에 성공해 10월 정식 계약을 맺었다. 중국 측에서는 인도 뭍바이—아메다바드 고속철 사업이 경쟁 입찰을 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패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양측이 각자 수주 과정에서 관대한 자금 조달

조건을 앞 다퓌 내놓았다는 점에서 치열한 물밑 경쟁을 짐작할 수 있음.

-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일 양국의 이러한 ‘당근 경쟁’을 두고 “신칸센은 일본의 정체성을 이루는 한 부분이다. 신칸센을 수출하기 위해 우리가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FT에 말했다.
- 중국과 일본이 앞으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각국의 주요 고속철 사업은 태국 방콕-파타야(194km), 미국 댈러스-휴스턴(385km),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350km), 영국 런던-버밍엄(225km) 등이 꼽힘.

■ 일본 해경 “무장한 中해경선, 센카쿠 인근 일본 해역 진입”(12/26, 연합뉴스)

- 무장한 중국 해경선이 26일 ‘센카쿠’ 열도 인근 일본 해역에서 운항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음. 중국 해경선 세 척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일본 해역에 들어와 약 70분 뒤 인근으로 이동했으며, 세 척 중 한 척은 기관포로 보이는 무기를 장착하고 있었다고 일본 해경은 밝혔음.
- 중국은 이 지역이 자국 영토라며 인근 해역에 대한 순찰을 정기적으로 해 왔으나, 중국 해경선이 무장한 채 일본 해역에 들어 온 것은 처음이라고 일본 해경은 덧붙였다.
- 앞서 지난 22일에도 센카쿠 열도 인근 수역에서 기관포로 보이는 무기를 선박 앞뒤로 탑재한 중국 해경선 한 척이 처음 발견됐으며, 해당 선박이 이날 세 척 중 한 척에 포함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중국에 공식 항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일본 외무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음.

자.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차. 일·러 관계

■ “日, 격투기스타 표도르 활용해 푸틴 방일 분위기 조성”(12/24,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러시아 격투기 스타 에밀리아넨코 표도르(39)를 활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설 것으로 보임.
- 일본과 러시아의 우호 관계 발전에 공헌한 점을 평가하는 취지에서 하세 히로시

- (馳浩) 일본 문부과학상이 표도르가 출전하는 경기장에 격려차 방문해 기념품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음.
- 교도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난항을 겪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의 실현을 위한 환경 정비를 도모하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한 해외 노동자 5만여 명…한 해 3억 달러 외화벌이”(12/23, 미국의소리)
 -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이승주 연구원은 현재 20여 개 국가에서 5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가 외화벌이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추정했음.
 - 이 연구원은 23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들이 연간 벌어들이는 돈은 2억 달러에서 3억 달러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음.
 - 이 연구원은 이와 함께 폴란드와 몽골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의 90% 이상을 북한 당국에 상납한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 파악을 위해 올해 하반기 몽골에서 두 차례, 폴란드에서 한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음.
 - 이 연구원은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의 소득은 북한 당국이 공제하는 금액과 중간 관리자의 착복으로 급여의 10분의 1인 월 100달러 이하 수준이라고 밝혔음.
 - 몽골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도 급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약 650 달러를 매달 상납한다며 이는 다른 국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음.
 - 이 연구원은 특히 몽골에선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일자리가 줄었지만 북한 노동자들은 상납금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즉, 청부업에 내몰리기도 한다고 전했음.
 - 북한인권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몽골에는 울란바토르 지역을 중심으로 약 1천700명에서 1천800명, 폴란드엔 약 800명의 북한 노동자가 파견돼 있음.
 -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폴란드와 몽골 정부가 현지 채용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자 계약사항을 점검해 불법 또는 인권 침해 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회의 토론자로 나온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의 타렉 체니티 부소장은 지난 2011년 유엔이 공표한 ‘기업과 인권이행 원칙’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의 인권 존중은 국가는 물론 기업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 체니티 부소장은 북한인권센터의 활동 내용을 토대로 국제사회에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북 어민들 마약중독 심각(12/23,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어선들의 잦은 해상조난 사고가 조업에 나선 어민들이 집단적으로 마약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뒤늦게 문제를 파악한 북한당국이 어민들의 상습적인 마약복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해왔음.
 - 20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조난사고는 대부분 마약과 관련이 있다”며 “어민들에게 있어서 마약은 술보다 보관이 간편한데다 효과와 지속성도 더 강해 조업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품”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북한어민들의 조난사고는 추위나 피로를 달래기 위해 과도하게 마신 술이 원인이 되어왔다고 소식통은 언급했음.
 - 이어 해상 조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당국은 2010년부터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이 술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자 어민들이 대체 수단으로 마약을 찾게 되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임.
 -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은 “예전에 어민들은 하루 어로활동을 위해 한 사람당 보통 여름철에 40%짜리 술 한 병, 추운 겨울철에는 술 세병을 준비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필로폰이 술을 대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 북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인 필로폰은 한번 흡입하면 24시간 효력이 지속되는데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몽롱한 상태에서 조업을 하던 어민들은 조난을 당하기 쉽다고 그는 말했다.
 - 소식통은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야 파악한 중앙에서 12월 초부터 어민들의 마약 중독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조업을 끝내고 부두로 돌아오는 어민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혈액을 채취해 마약사용 여부를 검열하고 있지만 단속효과가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북 농민, 쌀값 하락에 생활고(12/24, 자유아시아방송)
 - 가을철 들어 하락하기 시작한 북한의 식량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농민들과 폐기발 농사에 의지해 살아가던 주민들의 생활형편이 더욱

- 어려워지고 있다고 여러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다.
- 22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장마당에서 통강냉이 1kg은 중국인민폐 1위안, 입쌀은 중국인민폐 3.5위안”이라며 “가을부터 내리기 시작한 식량가격이 고정된 상태에서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는 올해 8월까지 통강냉이 kg당 중국인민폐 1.8위안, 입쌀 6위안이던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싼) 가격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 올해 북한의 농사가 잘 돼 이미 주민들이 1년치 식량을 미리 마련해 놓은 형편이라며 때대끼(한끼벌이)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식량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식량 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있는 것 같다고 그는 설명했다.
 - 이와 관련 24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회령시 현지에서 강냉이 1kg의 값은 북한 돈 800원으로 이는 중국 인민폐로 60전에 불과하다”며 “입쌀 역시 장사꾼들이 넘겨받는 가격은 중국인민폐 2.5위안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소식통은 “반면에 농민들이 겨울철에 주로 신는 ‘군대동화’는 장마당들에서 북한돈 30만원, 중국인민폐로 환산하면 230위안”이라며 “이는 군대동화 한 켤레를 사려면 농민들이 장사꾼들에게 입쌀 90kg 이상을 넘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 특히 북한 북부 국경지역은 11월 27일 폭설이 내린 후 석탄 1톤에 중국인민폐 400위안, 땀감용 나무는 한 입방에 중국인민폐 150위안까지 올라갔으며 겨울철 한 가정에서 아무리 땀감 나무를 적게 사용한다고 해도 3.5입방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北 ‘南 인권백서’ 발표…국제사회 ‘인권공세’ 물타기(12/26, 연합뉴스)
- 국제사회의 ‘인권공세’에 날로 궁지에 몰리는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한의 인권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 북한의 남조선인권대책협회(이하 협회)는 26일 “올해에도 남조선에서는 세인을 경악케 하는 참혹한 인권유린 참사들이 연이어 빚어져 온 민족과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냈다”며 ‘2015년 남조선인권유린 조사통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협회는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재미동포 신은미 씨 등의 ‘중북 논란’, 언론탄압, 물대포와 최루액을 동원한 시위진압, 메르스 사태 등을 올해

남한에서 있었던 ‘인권유린’ 사례라고 주장했다.

- 또 ‘북한 송환을 희망하는’ 탈북 여성 김련희 씨 사례, 청년실업, 아동학대, 군대 내 폭행,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 발언과 지난 6월 서울에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며 비난의 날을 세웠음.
- 협회는 박 대통령의 북한 인권 언급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설립 등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에 도전하는 인권 모략 소동이 북남관계에 미칠 파국적 후과에 대해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보고서는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 등 국제사회의 인권공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한을 끌어들이므로써 사안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임.
-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지난 2013년 12월 북한의 각종 매체에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도 남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트집을 잡은 바 있음.

■ “北양강도 주민 5명, 탈북 도운 ‘죄’로 처형”(12/27, 데일리NK)

- 북한 양강도 당국이 지난 9월 주민들의 탈북을 도운 주민 5명을 처형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 양강도 국가안전보위부는 국경통제와 감시 강화에도 탈북하는 주민들이 줄지 않자, 본보기로 주민 5명을 처형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음.
- 양강도 소식통은 최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지난 9월 중순 혜산시에서 탈북자를 도왔다는 죄명으로 주민 5명이 총살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면서 “국경에 담장을 짓고 철조망을 치고 있지만 탈북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특히 이들을 도운 사람들도 줄지 않아, 이들에 대한 시범검(본보기) 차원에서 이들이 처형됐다”고 전했다.
- 이어 소식통은 “이번에 총살당한 사람들은 혜산시 강구 유치원 원장 부부와 송봉동 16반에 사는 40대 여성, 그리고 강안동 47반에서 살고 있는 밀수꾼 부부로 총 다섯명이다”면서 “이들은 평소에도 주변인들과 잘 어울렸고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장사와 밀수를 하던 사람들이었다”고 덧붙였다.
- 그러면서 소식통은 “이들에 대한 재판 판결문에 한 주민이 80여 명을 탈북시켜 처벌한다고 나왔는데, 주민 대부분은 이는 죄가 부풀려진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주민들은 ‘한 사람이 80여 명씩 탈북시켰다면 5명이 4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인데 누가 믿겠냐’며 ‘시범검으로 죽어야 하니까

주민조사에서 없어진 사람들을 모두 탈북으로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 특히 소식통은 “주민들은 ‘시범검으로 죽어야 하니까 조금 한 것도 많이 한 것으로 자백을 받아냈겠지’라며 총살당한 사람들에게 대한 부정관결을 비난하고 있다”면서 “5명은 밀수나 장사를 해오던 사람들인데, 이 과정에서 탈북을 도운 것이 꼬투리 잡혀서 변을 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 북한인권

- 2016년 북한인권 NGO 활동방향(12/23, 코나스)
 - 지난 17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2년 연속 채택된 것을 계기로 북한 반인도 범죄자들의 실질적인 기소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음.
 -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들을 당장 국제형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더라도 반인도범죄자들을 국제형사판소에 세우는 법적, 기술적 하자가 없는 만큼 내년에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음.
 - 원재천 한동대 교수는 “금년 6월 서울에 개소한 UN 북한인권사무소는 북한인권의 국제화를 의미한다”며, 국가차원과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 차원에서 UN 북한인권현장사무소와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 이어 김윤태 통일전략연구소장은, 한국이 2016년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UN 인권이사회 의장국이 되는 만큼, 2016년 북한인권운동의 방향은 국제적으로 북한인권 실무기구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내적으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북한인권법 통과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하며, 북한의 고위층이나 최측근에 대한 숙청을 북한 인권문제와 연계시켜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들을 각성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탈북자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김정은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면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김정은을 지지하는 핵심세력들의 결집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 또한 유엔 차원의 조사와 압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상세하게 북한 내부로 전달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야 한다며, 외부 소식을 북한 내부에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유엔차원의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 일상 속 인권유린 증언집 발간”(12/23, 자유아시아방송)

- 성통만사의 남바다 사무국장은 북한 주민의 고단한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알리기 위한 이야기책 ‘얼굴없는 사람들’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북한에서 15개 다른 직업을 가졌던 탈북자 30여 명과 지난 8월까지 4개월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번 증언집을 발간했다는 설명임.
- 탁아소 보육교사, 군인, 건설노동자, 의사, 외교관 등을 지낸 탈북자들이 겪은 삶과 인권 유린을 담은 증언집은 영어(The Faceless Ones: Story of North Korean Ineluctable Defects)로도 발간됐음.
- 남 사무국장은 증언집이 이들의 생생한 증언을 담고 있지만 ‘얼굴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갖게 된 이유는 북한 주민은 누구나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등 당국의 지시에 따라 강요된 삶을 살고 있어 북한에서 ‘개인’이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남 사무국장은 많은 한국 사람이 북한에서도 직장이 있으면 기본적인 생활은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는데, 쌀 1~2킬로그램 정도에 불과한 월급을 받는 등 주민들은 직장에서 일과를 마치고 장마당 활동 등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임.
- 심지어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외교관 조차도 공관 임대료를 당국에서 지원받지 못해 밀수 등 외화벌이에 나서고, 이 같은 불법활동을 통해 북한에 충성자금까지 보낸다는 증언도 나왔다는 것임.

■ 여야 北인권법 의견 좁혀…지도부 추가협의 남아(12/26, 뉴시스)

- 여야가 26일 쟁법법안 릴레이협상을 갖고 북한인권법에 대한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다. 양측은 지도부 추가협의를 통해 법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기로 했음.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 김정훈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 귀빈식당에서 쟁점법안 회동을 시작했다.
- 이들은 서비스산업발전법 논의에 이어 4시10분부터 국회 외통위 여야 간사인 심윤조·심재권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55분간 북한인권법에 대한 회동을 가졌음.
 - 양측은 법안의 대부분에 대해 이견을 좁혔지만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장소, 인권자문위 구성, 기본원칙 등 3~4가지 쟁점을 남겨둔 상태로, 최종 타결을 여야 지도부에 맡겼음.
 - 당초 새누리당은 북한인권 관련 기록을 수집·보존하는 업무를 법무부에서, 새정치연합은 통일부에서 해야 한다고 맞서왔음.
 - 하지만 양측은 협의를 통해 인권기록을 수집하는 업무는 통일부에서, 보존하는 업무는 법무부에서 하는 방안을 추진기로 하는 등 입장차를 다소 좁혔음.
 - 여야는 인권자문위 이사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나타냈는데, 새누리당은 교섭단체가 각각 3분의 1, 통일부가 3분의 1을 추천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 교섭단체가 동수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기본원칙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안은 ‘북한인권을 위해 노력한다’는 수준의 내용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증진과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을 넣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이 외에 새정치연합은 인권법과 별개로 전단살포 규제를 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새정치연합은 과거 만들어졌지만 처리되지 않은 남북상호 비방중상중단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입장을 내놨음.
 -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합의될 전망이 없는 건은 아니지만 여야 간사가 과거 논리와 논쟁을 반복하는 상황이 계속돼 최종 타결을 지도부에 맡겼다”며 “다른 쟁점법안 결과와 함께 놓고 양당 지도부가 최종 타결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음.
 - 새정치연합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90% 이상 합의됐다”며 “새누리당이 우리 당의 안을 받아줘서 타결된다고 해도 아주 훌륭한 북한인권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3. 탈북자

- 한국 내 탈북자 실업률 5% 미만으로 크게 줄어(12/22, 미국의소리)
 - 한국 통일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실업률이 지난달 말을

- 기준으로 4.8%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 이는 지난 2011년 12.1%에서 2012년 7.5%, 2013년 9.7% 그리고 지난해 6.2%에 이어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임을 보여준 수치임.
 - 특히 지난해 한국 국민 전체의 평균실업률이 3.5%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1년까지만 해도 1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던 격차가 1% 포인트대로 좁혀진 셈임.
 - 이와 함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생계급여 수급률과 학업 중도 탈락률도 2011년 각각 46.7%와 4.7%에서 올해는 25.4%와 2.2%로 크게 낮아졌음.
 -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자들의 자립과 자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과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주요 정착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 당국자는 그러나 고용의 질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면서 이 때문에 탈북자들의 취업기간도 평균 20개월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 정부는 이런 허점을 보완해 탈북자들의 장기 근속과 자기 계발을 유도하기 위한 자산형성제도인 '미래행복통장'을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음.
 - 미래행복통장은 탈북자들이 직장에서 받은 수입 가운데 한 달에 최대 50만원까지 저축을 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 4년 간 최대 5천만원, 미화로 4만 2천 700달러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임.
 - 이 돈을 교육이나 창업, 결혼, 주택 자금으로 활용해 탈북자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성장 발전시킬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임.
 - 한편 통일부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는 모두 1천 88명이고 누적 입국자 수는 2만 8천 607명이라고 밝혔음.
 - 탈북자들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세 명 가운데 두 명 꼴로 살고 있고 전체 탈북자 가운데 초·중·고등학생은 2천 717명, 대학생은 1천 935명으로 집계됐음.
 - 통일부는 이와 함께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자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임.
 - 통일부 당국자는 주로 중국 출생인 이들이 탈북자로 분류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양육비 지원을 골자로 한 정착지원법상 가산금 제도 신설이나 대학입학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유관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4. 이산가족

- 통일부·적십자, 국내 거주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12/27, 머니투데이)
 -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남북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함.
 - 이산가족 실태조사는 ‘이산가족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며, 조사방식은 이산가족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문조사원에 의한 전화·방문조사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됨.
 - 이에 따라 오래전에 신청을 해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중 개인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이산가족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과 사망한 신청자의 형제 등 가족도 이산가족교류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을 해야 함.

5. 납북자

- 특이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IFRC, 북 수해 복구 지원 마무리 단계(12/22,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적십자사는 22일 ‘북한 재난 사업’ 보고서를 내고 올해 홍수로 피해를 입은 북한 지역에서 펼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전했다.
 - 국제적십자사는 함경남북도와 나선 지역 등 수해 지역에서 거처를 잃은 주민들을 최우선적 수혜자로, 살림살이를 잃어버린 주민들을 다음 우선 순위로 정해 구호 물품을 제공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 이 기구는 북한 주민 1만 8천 8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주방 기기 등 구호품을 지원했음.
 - 하지만 이 기구는 수질 정화제와 이불과 같은 비식량 구호품들을 연말까지 보낼 예정이었으나 구매와 검사에 시간이 걸려 두 달 정도 구호품 제공이 연기됐다고 전했다.

- 따라서 ‘북한 재난 사업’은 조금 연장돼 내년 2월에 완료될 전망이다.
 - 이 기구는 또 ‘재난 대비 점검 회의’를 열고, 긴급 및 재난 대비 국가 위원회의 대표들이 함께 한 가운데 올 여름 북한의 홍수 상황 대처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 이 외에도 국제적십자사는 84명의 적십자사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식수, 위생 연수’을 펼치고 훈련과 준비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 뿐만 아니라 국제적십자사는 적십자사 봉사자가 참가한 가운데 마을 기반 ‘조기 정보와 대피 훈련’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유엔, 北홍수 피해 주민에 10만 달러 지원(12/23, 데일리NK)
- 유엔이 올해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에게 10만 달러를 특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 12월 23일 미국의소리 방송(VOA)은 국제적십자사(IFRC)가 22일 발표한 ‘북한 홍수 피해 보고서’를 인용해 세계식량기구(WFP)와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등 5개 유엔 기구가 국제사회에 긴급 지원을 호소해 모금액 10만 달러를 북한 수재민에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 유엔은 이 자금으로 수재민들에게 긴급 거처를 마련해주고, 식량 이외의 구호물자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 수재민 1만 1천여 명에게는 고열량 영양 비스킷과 보건의료 세트를, 11개 소학교와 고등중학교에는 학용품을 제공했으며, 북한 여성 3천여 명에게는 속옷과 여성용품 등을 지원했다.
 - 이밖에 수질정화제와 수질정화 장비, 위생용품 등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와 관련해 국제적십자사는 “지난 8월 초 황해남도과 함경남북도에 이어 8월 말 라선 시에 내린 집중호우가 북한 연간 평균 강수량의 절반을 넘었다”면서 “이로 인해 89명이 사망하고 1만 2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 국제적십자사는 또 “가옥 5천 370여 채가 부분적으로 파손 또는 파괴됐고, 주민 5천 400여 명에 대한 식수 공급이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 앞서 국제적십자사는 북한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46만 2천 스위스 프랑(약 47만 5천 달러)을 긴급 투입해 수재민 2천 200가구를 지원한 바 있음.
 - 이와 함께 천막과 담요, 조리기구, 위생용품, 수질정화제 등 식량 이외의 구호물자도 지원했으며 조선적십자회 관계자들에게 위생 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적십자사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해 1월 말까지 예비구호품 비축을 마쳐 2월 말에는 홍수 피해 대응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리히텐슈타인, WFP 대북 사업에 10만 달러 지원…5년째 계속(12/24, 미국의소리)
 - 세계식량계획 WFP는 최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리히텐슈타인이 대북영양 지원사업에 미화 10만 달러(\$101,626)를 기부했다고 밝혔음.
 - 지원금은 북한 영유아와 산모,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하는데 사용됨.
 - 리히텐슈타인 외무부의 마누엘 프리크 대변인은 리히텐슈타인은 5년째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대북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음.
 - 지난 2011년 이래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 지원사업에 미화 60만 달러를 지원했다는 설명임.
 - 리히텐슈타인 정부는 자금이 부족한 인도주의 사업이나 ‘잊혀진 위기’ 상태에 있는 나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지원 사업도 이런 기준에 부합한다고 프리크 대변인은 밝혔음.
 -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 지원사업이 현재 심각한 자금 부족을 겪고 있어 지원을 결정했다는 설명임.
 - 세계식량계획은 함경남북도와 평안도, 강원도 등 북한 내 8개도와 남포시 등 9개 행정구역의 어린이와 임산부 180만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하고 있음.

8. 북한동향

- ‘미국은 인종과 피부색 때문에 차별과 멸시를 당하고 언제 총에 맞아죽을지 몰라 공포에 떨어야 하는 인간생지옥, 인권말살 지대라며 ‘미국은 주제 넘는 인권재판관 행세를 그만두고 인권피고석에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12.23, 중앙통신·노동신문/미국은 인권피고석에 스스로 나서라)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